

# 다음달부터 전면 등교·교육활동 정상화

### “원격수업, 교육 효과성 제고 목적으로 활용”

### 5월부터 대면 교육활동, 방과후·돌봄 정상화

코로나19 유행 감소로 일상 회복이 추진되면서 학교 현장도 오는 5월부터 전면 등교와 교육활동 정상화를 시작한다.

감염병 확산을 막고 등교하는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의 원격수업은 5월부터 종료된다.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은 정상화되며 수학여행도 갈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조치가 권고로 바뀌게 되면 교육부는 등교·기말고사 응시 방안도 마련한다.

유엔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 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 속 올해 1학기 전교생 중 확진자 3%, 격리 15%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청과 학교의 판단에 따라 전면 등교부터 원격수업까지 4가지 학사 운영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준비, 이행, 안착 3단계 절차를 거쳐 일상 회복을 추진한다. 오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준비 단계’다.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5월 이후 학사 운영 일정을 수립하게 된다. 정상 등교 준비를 위해 단축수업 등 탄력적 수업시간은 중단이 권고된다. 다만 가정학습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은 법정수업일수 30%에 해당

하는 초·중·고 57일, 유치원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사운영 혼란을 막고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조정돼도 현행 지침을 옹호 해 동안 유지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5월부터 정부가 코로나19의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4주간의 이행 기간이 끝나는 5월22일까지는 교육분야도 일상회복 이행 단계를 시작한다.

모든 학교는 정상 등교를 실시한다. 방역 목적으로 등교 밀집도를 제한하는 목적의 ‘원격수업’은 이 시점부터 종료하고, 교육적 목적에 부합할 때 활용한다.

학교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대면 교과 수업, 체험활동 등 비교과 활동을 전면 재개한다. 방과 후 학교와 유·초 돌봄 교실도 정상 운영이 원칙이다.

수학여행, 소풍(체험학습)과 같은 숙박형 프로그램 시행은 학교가 유행 상황과 학생·교원 안전,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해 교육청과 학교가 정한다.

교육부가 감염병 예방 목적의 원격수업 종료를 선언한 것은 지난 2020년 4월9일 온라인 개학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1월22일 일상회복 당시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에 전면 등교를 허용했으나 과대·과밀학교에서는 방역 목적의 등교 인원 제한을 허



용했다.

다만 교육부는 감염병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면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정해 학년·학급 단위로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단약을 대비해 학교가 짠 업무 연속성 계획(BCP)도 유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3%, 15%와 같은 기준치를 교육부가 안내하지 않고 자율 운영체제를 강화한다”며 “교육청에서 올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지침을 마련할 때 그에 준해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5월23일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낮출 경우, 확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등교, 출결·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1학기 기말고사 응시 방안도 본격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 때부터는 학교 일상회복 안착기

로 돌입하며 그간의 원격수업 경험을 살린 다양한 수업을 활성화한다.

2년 동안 운영했던 원격수업은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학교 간 연계 수업 등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수업 현장에 활용된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까지 ‘케이(K)-에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원격수업 운영을 돕는다.

누적됐던 학생들의 학습 결손 회복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학기 초 학생별 기본학력 진단을 진행해 교과보충, 대학생 튜터링, 책임지도 강화에 나선다.

여름방학에는 10명 내외가 모이는 캠프 형태의 대면 교과보충, 사회성 함양 단기·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학기 이후에는 대면 중심으로 1대 1, 1대 2 또는 10명 내외의 교육회복 활동을 확대해 나간다.

김재환기자



### 담양경찰, 22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담양경찰서(서장 국승인)는 지난 15일 2022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 광양경찰, 방범협력단체와 범죄예방 합동순찰 실시

광양경찰서(서장 장진영)는 최근 광양읍권 방범협력단체 회원들과 함께 야간 범죄예방 합동순찰을 실시하였다.

광양=심종섭기자



### 나주경찰, 여름철 폭우 등 자연재난 대비 합동점검

나주경찰서(서장 김선우)는 여름철 폭우 등 자연재난을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 우려 지역인 하천주차장,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기동취재본부



### 강진경찰, 어르신 보호를 위한 협력단체 교육 실시

강진경찰서(서장 위동섭)는 18일 노인 범죄 예방을 위하여 강진군 관내 강진노인맞춤돌봄센터에 진출하여 생활지원사 및 사회복지사 총 140명 상대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화순소방, 주택 창고 화재진압 소화기로 큰 불 막아

화순소방서(서장 이중희)는 18일 춘양면 석정리 한 주택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주택 내 설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 광주동부소방,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는 18일 오전 용산 생활체육 공원 운동장에서 2022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평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코로나19 속 지난해 하반기 배달원수 ‘역대 최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10월 음식 배달, 택배 배송 등에 종사하는 배달원 수가 42만8천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20일 서울 시내 도로에서 배달원이 업무를 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없었던 2년 전과 비교하면 22.6% 늘어난 수치로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거리두기 마지막 한주’ 학생 9만1225명 확진

### 개학 이후 197만명 확진...5주째 감소세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전국 유·초·중·고 학생 9만1225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집계됐다.

다음달 학교의 일상 회복을 앞두고 전면 등교율은 99.1%,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 비율은 95.5%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2~18일 전국에서 유·초·중·고 학생 9만1225명이 추가 확진됐다. 올해 1학기 들어 누적 확진자는 197만2905명으로 늘어났다.

주간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는 1만3032명으로 학기 시작 이후 처음 1만명대로 낮아졌으며, 지난달 8~14일 5만8450명에서 5만8166명→5만2932명→3만7134명→2만3832명→1만3032명 등 5주 연속

감소세다. 교직원 확진자는 같은 기간 1만1026명이 추가 집계돼 누적 17만5141명이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집계치에서 시도교육청 지역 보고로 인해 지난 11일 이전 나온 학생 6585명, 교직원 657명이 각각 추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학생 확진자는 초등학생이 4만6853명(51.4%)으로 절반을 넘었다. 중학생 2만2146명(24.3%), 고등학생 1만6524명(18.1%), 유치원생 5271명(5.8%) 등 순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3만8726명(42.5%), 비수도권에서 5만2499명(57.5%)이 추가 확진됐다. 지난 18일 유·초·중·고 학생 전

체 587만4130명 중 95.5%인 560만7996명이 등교했다. 학생 등교율은 최근 4주 동안 86%, 90.3%, 93.4%, 95.5%로 상승세다.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확진, 코로나19 임상증상, 신속항원검사(RAT) 등으로 자가진단 앱에서 등교 중단을 통보 받은 경우나 가정 학습을 신청한 학생들이다.

학교는 2만156개교(99.1%)가 전면 등교했다. 부분 등교는 100개교(0.5%), 전면 원격수업은 6개교였다.

대학에서는 지난 12~18일 학생 5007명, 교직원 979명이 확진자로 추가 집계됐다. 개강 이후 누적 확진자 수는 학생 17만8013명, 교직원 2만1269명이다.

오유나기자

## “미터기 끄고, 20% 할증”...바가지 요금 공항택시 139건 적발

### 부당요금징수 84%

서울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부당요금 징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인 대상 택시의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간 단속공무원 18명을 투입해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통불편에 대한 현장인터뷰(2846회)를 실시한 결과 139건의 불법영업행위 적발됐다.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보면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는 시계할증 적용이 되지 않는데도 ‘택시요금에 20% 시계할증을 적용한 부당요금징수’가 전체 117건(84%)로 가장 많았다. 이 외 ‘사업장 구역 외 영업’이 17건으로 12.2%를 차지했고, ‘미터기 미사용’은 4건으로 2.9%를 나타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한 방문객은 12만3979명에 그쳤지만, 올해 1~2월 방문객은 18만1850명으로 47% 늘어난 상황이다.

시는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택시 부당요금 징수 특별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단속인력을 기존 18명에서 25명으로 늘려 적발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또 관광객 증가에 따라 공항 이외에도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대학로, 남산, 한옥마을 등으로 단속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된다.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시 택시 운전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도 적용된다.

이슬비기자